

맞춤형 임신·출산비용 지원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임신·출산 장려제도가 부족한 상황. 저소득층 및 난임 부부 등의 임신·출산에 따른 각종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
- 출산 전·후 임신부에 대한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,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

새누리의 약속

-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
-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
- 난임부부 채외수정·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
- 고위험 임신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
-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
-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

새누리의 실천

-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

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

새누리의 진단

- 노산 등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개입이 부재할 경우 고령 임신부 본인은 물론 태아 및 신생아의 생명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음.

새누리의 약속

- 고위험 임신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
- 국가가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,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신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
- 고위험 임신부의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/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과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 운영

새누리의 실천

- 2014년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

임신 ·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도서산간 및 농산어촌 일부지역에서는 산부인과 병·의원의 폐업 증가 및 개업 전무, 산부인과 진료인프라가 매우 취약

새누리의 약속

-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
-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
- 산부인과의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

새누리의 실천

- 2014년 분만 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및 산부인과 외래지원 사업비 확대
- 2014년 예산 반영을 통해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추진 및 사업 지원

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

새누리의 진단

- 임신기 여성을 보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, 일·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제도 미흡
- 임신기간 동안 초기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으며, 말기 36주를 전후로 하여 조산 위험이 높아 일하는 여성들의 태아 및 모성보호조치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
-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
-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

새누리의 실천

-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「근로기준법」 개정

‘아빠의 달’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

새누리의 진단

-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‘육아 휴직’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‘아빠의 달’ 도입
- 30일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%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

새누리의 실천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

새아기 장려금 지급(자녀장려세제 도입)

새누리의 진단

-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미흡

새누리의 약속

-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
-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(부부)단위로 적용
 - 일정소득 이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,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
 - 단, 근로장려금(EITC)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%만 감액지급

새누리의 실천

- 자녀장려세제(새아기 장려금) 신설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
-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실시

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,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, 세제지원 및 주택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,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
-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%에서 10%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2014년 예산 반영

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확충에 초점을 뒀. 민간시설 등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 발생

새누리의 약속

-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,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
-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
-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
-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

새누리의 실천

- 2013년 예산 및 2014년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국공립·공공형 어린이집 확충

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

새누리의 진단

- 시설보육 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시설 및 가정내 양육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아이 키우기에 큰 애로가 있음.
- 영아종일제 및 상황별·맞춤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선택권이 있는 자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△기본형(현행 아이돌보미 파견) △중합형(기본형+가사서비스) △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
-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(현행 만0세)로 확대하되 취업모(맞벌이 포함), 다자녀, 장애부모로 한정하고,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
-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, 부모상담,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
-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

새누리의 실천

-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「아이돌봄지원법」 개정
-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
- 2014년부터 예산 반영

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.24명으로 2060년에는 노령인구가 유년인구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
- 초저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
-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률 여전히 저조.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, 육아휴직 등은 거의 활용되지 못함.

새누리의 약속

-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입학전(3학년)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
- 비정규직 여성의 '임신·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', '육아휴직 장려금', '대체인력채용장려금'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

0~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

새누리의 진단

- 영유아 유아교육·보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·보육 기반 조성이 필요
-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별 선택권을 보장하여 부모는 편하고, 아이는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0~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,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
- 3~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·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
-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
- 민간시설의 보육·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

새누리의 실천

-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